

국세청 조사4국, 한국타이어 고강도 세무조사 3대 쟁점

# 1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 2 현식-현범 오너3세 승계

# 3 티스테이션, 골목상권 위협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 총괄 부회장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국내 1위 타이어 회사인 한국타이어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적폐 청산'부터 '일감몰아주기 타파'까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칼' 조사4국 투입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사장과 사돈 조양래 회장을 겨냥했다는 해석부터 계열사 신양관광개발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와 지나친 상표권 사용료, 조현범 사장과 조양래 회장 등 오너일가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알고 있으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세청의 핵심'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조사4국은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특히 이들은 기획·심층 수사와 조사가 많아 조사4국을 만난 웬만한 기업은 한 번쯤 곤욕을 치렀다고 보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타이어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승계작업?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비상장 자회사 엠프론티어와 신양관광개발 등 오너 3세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은 엠프론티어 지분을 각각 24%씩 보유 중이고, 조양래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씨는 12%

를 가지고 있다.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율, 그리고 내부거래액 모두 규제 범위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신양관광개발(비주거용 건물 관리업)도 비슷하다. 이곳의 소유지분 현황을 보면 조현식, 조현범, 조희경, 조희원 등 오너 일가 4남매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지주회사)와 한국타이어 등 내부거래로만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조현범 사장의 형인 조현식 사장이 한국월드와이드를 이끌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주회사라는 특성을 고려해도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48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3%에 달해 과도한 수익을 얻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타이어 오너 3세의 엠프론티어 보유지분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타이어그룹의 경영권 승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엠프론티어가 앞서부터 조 부회장과 조사장의 승계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돼온 데다, 지분을 처분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의 이유로 뇌물 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딸 수연씨는 2001년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과 결혼했다. 한국타이어 경영진 일가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 부회장과 조 사장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중"이며 "현재 조희경은 두 아들 중 특별히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골목 상권 위협?

한국타이어가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판매망인 티스테이션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것에 대해 "승계 자금 확보를 위해 동네 장사까지 뛰어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티스테이션은 단순 타이어 유통매장을 넘어 엔진오일·브레이크패드 교환 등 자동차 경정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1위 타이어 업체로 전국 510여개의 티스테이션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 공업사들은 티스테이션의 유통망이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티스테이션은 3급 정비수준 경정비 서비스 '스마트케어'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9년 5월 말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양성운·정연우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서 계속

노동계·시민단체는

“인상폭 낮다” 투쟁 예고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다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680원 정도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고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가량이 돼야 했다"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별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싼 각계 반발과 관련해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달라"며 한발 양보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금융권 클라우드 규제 완화... 개인정보도 활용 가능

보안·감독체계 강화방안 마련  
IT인프라 구축비용 감소 기대

비(非)중요정보로 제한됐던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보다는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현재 정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범위를 비중요 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규제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적용, 신기술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고 핀테크 기업에게 IT설비 구축과 같은 초기 시장진입 비용 등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

다고 판단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을 집적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EU·영국은 클라우드 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반면, 싱가포르·미국은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안장치,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로 넓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혁신 상품,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고유식별정보 활용시 일시적 거래량 집중에 장애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AI기반 대화형 뱅킹서비스도 가능

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정보보호 의무 준수, 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중요장비 이중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시스템 구축·운영, 암호화 적용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EU 등 해외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디딤돌 대출금리 0.1~0.25%p 인하... 年 최대 28만원 절감

<디딤돌대출 금리 변경 대비표>

국토교통부

대출기간 연소득	현행				개선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00%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5%	2.65%	2.75%	2.85%	2.45%	2.55%	2.65%	2.7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5%	(좌동)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 0.1~0.25%포인트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0.25%포인트, 2000만~4000만원은 0.1%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된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은 우대금리까지 합하면 최저 금리가 1.60%까지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